

<총평>

2018년 10월 13일 실시한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는 이해를 요하는 이론 문제가 9문제, 법령 문제가 11문제이다. 그리고 법령 문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제주특별법 등 지방자치론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출제되었다.

한편, 지난 6월에 실시했던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 문제의 경우 이론 문제가 1문제에 불과하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문제, 한국의 지방자치역사 2문제, 법령 문제가 16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았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가 지난 6월에 실시되었던 서울시 7급 지방자치론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론은 범위가 좁고(위계점 지방자치론 교재 기준으로 본문, 기출문제, 예상문제, 지방자치법 전체 조문 모두 포함해서 350페이지 정도), 행정학, 행정법, 헌법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 경우 지방자치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 선택한 수험생에 비해 유리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부족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라면 90점 이상은 우수(시험합격에 기여)하고, 80점에서 85점은 보통, 75점 이하는 미흡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론은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양이 적은 반면, 암기해야 할 법령 내용이 많다.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암기하기 바라며, 교재 뒤 부록에 있는 지방자치법은 전체 조문을 꼭 읽어두는 것이 좋다.

끝으로 지나간 시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4. 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 ①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③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 ④ 지방채의 차환

[해설] ③(틀림) 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은 지방채 발행 사유가 아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정답] ③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215-217.

5. 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 ①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어려움
- ② 행정기능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발생 가능성
- ③ 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연 가능성
- ④ 의사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

[해설] ①(틀림) 지방정부 계층구조 중 중층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능력과 기능을 보완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 계층구조 중층제>

1. 중층제의 장점
 - (1) 자연지리적 요인과 역사적 이유로 인해 중층제가 된다.
 - (2)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의 분업적 수행이 가능하다.
 - (3)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능력과 기능을 보완하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 (4)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가능 :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적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한다.
 - (5) 단층제에 비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²
2. 중층제의 단점
 - (1) 이중행정·이중감독의 폐단 및 기능배분의 불명확화로 인해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 (2)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획일적 처리가 된다.
 - (3) 계층이 많아져서 업무의 수행이 지연된다.
 - (4)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의사전달이 느리고 왜곡되기 쉽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99-100.

6.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 ①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해야 한다.
-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해설] ②(틀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지방의회 정족수 규정>	
정족수 요건	관련 규정
5분의 1 이상	의안 발의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4분의 1 이상	① 불신임 발의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자격심사 청구 :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분의 1 이상	① 행정사무조사 발의 :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② 임시회 소집 요구 :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④ 지방의회의 개최 :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위원회 부결 의안의 본회의 상정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3분의 2 이상	① 조례에 대한 재의결 정족수 :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② 회의 비공개 :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자격상실의결 : 피심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징계 중 제명 의결 :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의결에 대한 재의결 정족수 :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④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58.

7.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 ①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 ② 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 ③ 수원시의 지방공사 설립·운영
- ④ 수원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결정

[해설] ③(옳음)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지방공사)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이다.

①②(틀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한다.

9.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해설] ③(틀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 ①(옳음)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옳음)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옳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경비의 부담>

-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 (2)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부담금).
- (3)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교부금).
- (4) 사도나 사·도지사가 사·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사·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184.

10.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정치의 구현
- ②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 ③ 민주정치의 원리
- ④ 정당 배제의 현실적인 한계

[해설] ②(틀림)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할 경우, 중앙당의 개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왜곡되고, 중앙당에 의한 공천으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측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 1. 장 점
 - (1) 정당 활동을 통해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 증대
 - (2) 정당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대응성과 책임성 제고
 - (3) 정당을 통한 여론 수렴 및 정책개발
 - (4)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탐색 비용 감소 및 참여율 제고
- 2. 단 점
 - (1) 중앙당의 개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 왜곡
 - (2) 중앙당에 의한 공천으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측화 가능성 존재
 - (3) 정당이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할 경우 지역 간 갈등 악화
 - (4) 당원들이 소속 정당과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특혜를 베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머신 정치(Machine politics)
 - (5) 빈번한 정권교체로 행정의 안정성·전문성·일관성 결여
 - (6) 인물 중심보다 정당중심의 투표로 인해 질 낮은 인사의 당선 가능성 존재

[정답] ②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55-56.

11.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② 정보제공(informing)
- ③ 조작(manipulation)
- ④ 상담(consultation)

[해설] ①(옳음)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중 협력관계(partnership),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통제(citizen control, 자주관리)가 주민에게 권력이 부여되는 실질적 참여에 해당한다.

주민참여의 효과에 의한 분류(S. R. Arnstein)	
비참여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를 교육하거나 치료하는 데 있는 단계이다. ㉠ 조작(manipulation) : 참여 흉내. 행정기관이 주민을 교육, 설득, 계도 ㉡ 치료(임시치료, therapy) : 행정기관이 책임 회피를 위하여 행하는 조치. 참여의 결과는 '청소운동'의 전개 등과 같은 책임만이 주민에게로 돌아옴.
명목적 참여	주민은 정보를 제공받아 권고·조언하고, 공청회·심의회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판단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유보되어 있다. ㉢ 정보제공(informing) : 행정기관에서 주민으로 통하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 ㉣ 상담(consultation) : 주민이 근린집회, 공청회 등에 출석. 행정기관의 자세는 <u>주민의사의 수렴보다는 요구된 과정을 거친다는 형식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단계.</u> ㉤ 유희(회유, placation) :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아직 이들에게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없는 수준.
주민 권력	기존의 권력관계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배분되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민에게 맡겨져 주민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 협력관계(partnership) : 회합식으로, 행정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행정기관에 맞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만큼의 영향력 있음 ㉦ 권한위임(delegated power) : 정책결정에 주민들이 우월한 권력을 가지고 참여 ㉧ 주민통제(자주관리, citizen control) : 주민들에 의한 완전자치가 실현되는 수준.

[정답] ①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43-44.

12.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투표실시권	ㄴ. 규칙제정권
ㄷ. 재의요구권	ㄹ. 청원의 수리와 처리
ㄴ. 조례제정권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ㄹ, ㄷ
- ④ ㄷ, ㄹ, ㄴ

[해설] ㄹ.(틀림)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ㄴ.(틀림)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정 원>
(1)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4)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5)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48-49, 143-151.

13.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감사청구제는 사법적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② 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③ 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전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 ④ 주민옴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된다.

[해설] ①(틀림)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맞으나 사법적 방법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다. 한편, 주민 참여제도 중 사법적 방법은 주민소송제도를 의미한다.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행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위법한 또는 게을리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민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②(옳음) 지방재정법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옳음) 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전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즉, 주민소환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비례대표의원 제외)이지만, 주민투표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④(옳음) 주민옴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주민옴부즈만에 해당)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주민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46-55, 193, 2018 7·9급 알파행정학 p.620.

14. 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 간 관계모형은 상하위 정부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라이트(Wright)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로즈(Rhodes)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B. 대리인모형(agent model) 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 ① ㄱ-A, ㄴ-B, ㄷ-C
- ② ㄱ-B, ㄴ-A, ㄷ-C
- ③ ㄱ-C, ㄴ-A, ㄷ-B
- ④ ㄱ-C, ㄴ-B, ㄷ-A

[해설] ④(옳음) 분리권위모형은 동반자모형, 내포권위모형은 대리인모형, 중첩권위모형은 상호의존모형에 해당한다.

1. Wright의 모형(정부 간 관계론)

(1)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 : Muramatsu의 수평적 경쟁모형
 분리권위형(독립형, 대등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한 분리 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를 갖는다.

(2) 포괄권위형(inclusive authority model) : Muramatsu의 수직적 통제모형
 포괄권위형(내포형, 포함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형태이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며, 강력한 계층적 통제를 받는다.

(3) 중첩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 가장 이상적인 모형
 중첩권위형(상호의존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자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심과 책임 영역을 지닌다. 이러한 중첩권위형에서는 ①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연방·주·지방정부에 의해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② 자치권과 재량권의 영역이 제한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③ 상호의존적이며, ④ 정부 간에는 협상·교환관계를 형성하면서 재정적 상호 협조와 경쟁관계가 이루어진다.

2. Elcock의 모형, 로즈(Rhodes) 모형

(1) 동반자모형 : 지방이 중앙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 대리자모형 : 지방은 중앙의 대리자로서, 중앙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3) 교환모형(절충모형) :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이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27-128.

15. 지방자치법 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군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 ③ 군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폐지·분합	법률 + 지방의회 의견(주민투표를 한 경우 생략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변경	대통령령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폐지·분합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후 조례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	조례 제정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리의 명칭과 구역 변경, 폐지·분합	조례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및 새로운 설정 ²	조례

- ①(옳음)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조례 제정 후 광역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②(틀림) 군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폐지·분합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한다.
- ③(틀림) 군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군의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영문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 ④(틀림) 군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94-95.

16. 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 ①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②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③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④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해설] ①(틀림)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경찰사무로 적합한 것은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이다.

<p>제주특별법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

구역의 규모가 커질 경우 시민과의 접근성은 오히려 곤란해질 것이다.

통합옹호론	통합반대론
(1) 분절화된 경우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초래되며, 지역 간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불평등이 초래된다.	(1)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공공선택론, 티부모형).
(2) 통합을 통해 분절화된 구역에 비하여 규모에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규모가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초래될 수 있다.
(3) 통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 능력이 확대된다.	(3) 통합의 효과는 공공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4) 광역 행정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를 해치고(주민의 참여 곤란), 주민들 간의 일체감 부족을 야기한다.
(5)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inter jurisdictional equity) 확보 면에서 유리하다.	(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의 확보 차원에서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행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정답] ④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35-39.

19. 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 ③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합병 방식 등이 있다.

[해설] ①(틀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로써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공법상 협력).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은 일반지방자치단체이다.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능(목적)	일반적·종합적	특정적·한정적
존재	보편적	이차적·예외적
구성원	주민	지방자치단체
권능	포괄적	개별적
설립·해산 절차	폐지·분합은 법률로 정함.	임의 설립·임의 해산 원칙 지방의회의 의결 + 상급 감독기관의 승인

- ②(옳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과 확보 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 ③(옳음)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 ④(옳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합병 방식, 연합방식 등이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35-41, 95-97.

20.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②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당업무이다.
-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현금 흐름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해설] ③(옳음)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재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틀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 ②(틀림) 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관리자의 담당업무이다.

지방공기업법 제9조(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④(틀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급 위계점 지방자치론, pp.194-196.